



# 17대 총선의 의미와 국회의 역할

역사의 질곡을 딛고 시대의 변화, 국민의 요구에 의해 17대 국회가 드디어 운곽을 드러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열린우리당의 절대다수의석 확보와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추격세에 의한 양당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3김시대 청산, 거물인사들의 낙선 등 글지의 뉴스 꺼리들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았던 총선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그동안 방탄국회, 당리당락, 매국노집단으로 비난 받아 오면서 민의를 대변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 위에 굴림해왔던 권력집단으로서, 16대국회를 비롯한 이전 국회의 모습들이 주마등화처럼 머릿속을 지나간다.

## ■ 17대 총선 득표 현황

개표현황	지역구	비례대표	최종
우리당	129	23	152
한나라당	100	21	121
민노당	2	8	10
민주당	5	4	9
자민련	4	0	4
기타	3	0	3

- 미디어 정쟁과 정치적 쇼(정책대결 부재)

이번 17대 총선은 변화와 개혁·진보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컸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기존 선거관과 별단 다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약에 대한 분석과 논쟁보다는 미디어 위주의 선거운동과 각 당의 정치적 쇼에 의해 단순히 여론몰이만 부추기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특히 탄핵정국으로 각 당은 안정적인 지지율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이것이 곧 정책의 부재와 감성선거에만 매몰되는 양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실제로 한농연중앙연합회에서 선거를 불과 10여일 남겨두고 각 정당별로 받아 본 농정공약에서도, 일부 정당을 제외하고는 형식적인 내용과 무응답으로 일변하는 무성의함을 보일 정도였다.

- 시민단체들의 약진과 한계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16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목소리 대변과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총선대응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4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난선운동, 'YMCA'의 총선시민감시운동, '총선물갈이연대'의 후보자 정보제공과 당선지지운동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중 총선시민연대는 1·2차에 걸친 낙선대상 명단을 공개했는데, 우연이든 아니든 낙선대상자 206명 중 63%에 해당하는 129명이 낙선 되었다.

특히, 전국농민연대에서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13대 요구과제' 발표와 '한·칠레 FTA찬성의원'을 공개하고 낙선운동을 천명하면서 어느 선거 때보다 유권자들의 요구가 뜨거웠다.

아쉬운 점은 시민사회단체이 이처럼 활발한 대응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한계점도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농연이 낙선·지지운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길거리에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집회·가두행진,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까지 금지해 놓은 규정이 너무 많아 실제로 수행할 방법에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 사라지지 않는 지역주의

우리의 정치권 선거에 언제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 바로 '지역주의'이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대통령탄핵사태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주의가 그나마 퇴색될 것이라는 기대는 선거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실망으로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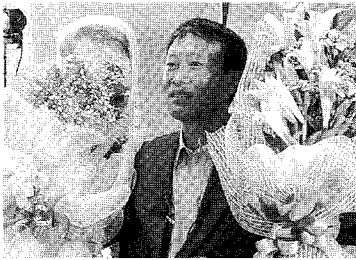
일례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흑색유인물이 나돌았다. 유인물은 '빨갱이 사위(노무현)가 대한민국에서 뭘 하려 했는가?'라는 제목에, "권양숙씨 아버지 - 000씨(노씨 장인)는 경남 XX면에서 인민위원장하며 다수의 양민을..." 등 노 대통령의 장인을 비방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각 정당의 당선구도를 보더라도 지역구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호남권을 휩쓸었고 한나라당도 영남권에서는 여지가 없었다. 자민련 또한 충남지역에서만 강세를 보였다.



## 총선의 의미

### - 민노당을 비롯한 농민대표 진출(거리투쟁종식의 희망)



민주노동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공조! 한농연 전직회장의 비례대표 입성! 어느 선

거 때보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진보진영이 큰 활약을 펼친 한판이었다.

선거결과 민주노동당에서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8명이 당선되었고,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한농연 전직중앙회장인 박홍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계급정당이 제도권정치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박홍수 한농연 전직 중앙회장, 전농의 강기갑 부의장과 전여농의 제주도연합 회장의 당선은 그야말로 400만 농민의 열망이었던 농민정치 세력화를 직접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낸 쾌거이다.

이로써 기존 보수정당에 의해 외면시 당하던 농업과 농촌·농민문제가 농민들이 선택한 농민 국회의원을 통해 국가경제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특히 올해 최대 농정현안인 쌀재협상과 각종 농업현안들을 풀어 나감에 있어, 한·칠레 FTA 비준반대 투쟁과정에서 1년간 무려 180일을 아스팔트 위에서 보냈던 기존 거리투쟁방식을 종식

시키고 제도권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 - 탄핵주도세력 축출(민주주의의 승리)

이번 총선에서 가장 논점이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 탄핵안 가결에 앞장선 수구세력 심판이었다. 물론 지역주의 퇴치, 부패정치 추방, 진보정당 원내진출 등의 의미도 컸지만 탄핵주도세력 축출이 단연 핵심이었다.

일부에서는 17대 총선결과, 탄핵을 반대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선전한 것은 국민들이 16대 국회의 탄핵 가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내렸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찌되었던 총선이 끝난 현시점에서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 맡겨두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노동당에서는 '탄핵문제'를 현재의 결정에 맡기기 보다 정치권이 해결하자며 3당 대표회담을 제의했으며, 열린우리당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다. 따라서 17대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헌재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조해 '탄핵철회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 17대 국회에 바란다

한농연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농업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15대 농정공약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 이번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요약해본다.

###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비한 철저한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참가의사를 밝힌 나라는 9개국이다. 이해당사국들의 협상참여의사 표시 마감일은 오는 20일이며, 이날 이후부터 양자협상이 진행돼 오는 9월 30일까지 WTO에 통보를 해야 한다. 이는 그만큼 협상이 코앞에 닥쳐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협상에 대비한 강력한 통상전략이 마련돼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17대 국회는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유예를 관철하는 것을 협상목표로 설정하고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최소화하는 양자협상에 협상력을 집중하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연내에 반드시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해 식량자급률을 명시하고 자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공공비축제를 즉각 도입하도록 하고, 이와 관계없이 수매제 또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농가소득 보장과 농가경영 안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총선 전인 지난 2월 정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제시 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비현실

적이고 실천가능성이 적은 선언적인 대책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실질적인 농가회생과 보호정책에 심혈을 기울릴 것을 주문한다.



특히,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작목을 중심으로 목표소득 지지제도를 도입해 단위면적당 순수익을 보장해 주고, 각종 직접지불제는 목표소득 지지제도 하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직접지불제 중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해 단가를 선진국수준으로 인상하고 대상농지 면적도 상한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공제를 확대시키고 농지 및 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적 재해대책과 철저한 사후대책을 수립해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고질적인 농가부채는 해결 전담부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농가의 경영상태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회생프로그램에 의한 지도금융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 농민조합원을 위한 진정한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농업에 있어서 가장 개혁과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농업협동조합이다. 농협은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 핵심적인 개혁대상이며

농업발전을 위해 함께 고생해야 할 동반자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이번에는 말로 정부주도하에 만들어진 농협의 태생적 한계를 딛고 농민조합원의 실익증진과 농민조합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농업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춘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기구와 사업체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 농민조합원의 실익증진을 위한 의사결정의 민주화 구조를 완성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유통과 가공사업 체계를 구축해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경제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농민조합원의 사업참여와 의사결정 확대를 위한 조합운영 개선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신중한 협상전략과 대비책을 수립하라

지난 16대 국회에서 우리농민들은 한·칠레 FTA의 졸속 처리에 크나큰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선대책 후협상'이라는 대원칙을 망각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과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는 칠레와의 FTA 이후 후속 협정으로 일본과 싱가포르, 아세안 등과의 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취약산업인 농업부문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원칙에 입각해 신중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투명한 논

의를 진행하기 위해 'FTA민간합동심의위원회'를 재편해야 한다. 또한 체결대상국에 따라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외적인 관세적용과 재협상 품목으로 설정하는 등 보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한·칠레 FTA의 과오를 17대 국회에서 또다시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

###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 주기 바란다.

위에서 당부한 몇 가지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무수히 많다. 경자유전원칙에 입각한 농지제도 개편과 통일을 대비한 남북농업교류,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과제들, 국내농산물 소비확대 정책 수립과 학교급식법 개정,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양성 등 17대 국회가 농업·농촌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발견하고 방대한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17대 국회가 시장경제 우선주의에 치우쳐 개방농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산업이며 환경기반산업인 하고 평가해 달라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탕이 되어야 진정 농업과 농촌, 농민 중심의 의정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농업과 농촌문제만큼은 당리당락을 떠나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한다. **인농연**